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한국산업위생협회

발전 기금 모금 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 ▷ 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및 단합
- ▷ 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 ▷ 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 ▷ 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 ▷ 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 가능

3. 기부혜택

- ▷ 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 ▷ 지원대상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 워크숍, 힐링캠프, 체육활동
 -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 ▷ 운영방법 :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 정기적인 감사 실시
 -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 ▷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 ▷ 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
(010-2345-3035)

정부·국회

김영훈 장관, 지역·업종별 중대재해 감축 및 한파 대비 안전관리 방안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26.(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기관장이 참석하는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감축 방안과 한파에 대비한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하며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웠던 5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과 5억 미만 건설업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점을 감안, 향후 이러한 취약 분야에 집중하여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올 겨울 한파에 대비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과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11.17.)에 따라 지방관서별로 구체적인 지역별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50인(역)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등 변화가 있는 반면,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업종 중심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염증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향후 지방정부와 유관협회 등 민간과 적극 협업하여 기타 서비스업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패트롤 점검과 소규모 건설 현장 특화 감독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현장을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더해 "겨울철에는 한랭질환뿐만 아니라 추위로 인한 화기 사용으로 질식,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 노동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소규모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겨울철 중대재해 예방에도 총력을 다해줄길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므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생명안전 감수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lit.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641

정부·국회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한 제조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희)은 '24.12.19.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떨어지는 금속코일(3.2톤)에 맞아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ㄱ씨를 11.11.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11.18.)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4번째* 사례이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11.27.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

* '23.12. 제련업체 중독사고, '24.6. 전지업체 화재사고, '25.2. 건설현장 화재사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CCTV 등 압수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ㄱ씨는 반복적 안전조치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표 ㄱ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재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659

고용노동부,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12.1.~12.5.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부족 등에 따라 거푸집·동바리가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갈탄·숯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등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이번 집중점검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 및 건설현장에 대해 발주처에서부터 현장까지 안전 의식을 정착·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등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책무와 콘크리트 분산 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등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하고, 따뜻한 옷·따뜻한 쉼터·따뜻한 물 제공 등 동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수칙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의 발주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재해 예방 지도 및 현장 점검 등의 활동과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산업현장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주간을 통해, 공공부문이 안전관리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 민간 발주 현장까지 확산시키고, 동절기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은 민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선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발주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고,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추락, 무너짐, 중독·질식, 화재 등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에 중심을 둔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줄 것"을 강조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661

정부·국회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월) 공포·시행했다.

12월 1일 공포·시행된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2>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3>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4>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 요시 교육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질식사고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동절기 건설현장 포함)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 겨울철 건설현장은 저수조·정화조 등의 내부 작업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 특히 주의 필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대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장관급

○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24년 3분기 누적 443명 → '25년 3분기 누적 457명

□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염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 ① 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②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③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④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687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669

정부·국회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4.(목)부터 약 2달간 이른 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 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 (업종)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 중심
(규모) 사업소득자 합산 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00여 개소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 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하고,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691

2026.1.16. 이후에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19. 1. 1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2026. 1. 16. 종료 된다고 밝히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 1. 16.부터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은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2021. 1. 16. 당시 이미 작성되어 유통 중이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른 유예기간: ▲ 1,000톤 이상: ~'22.1.16.,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3.1.16., ▲ 10톤 이상 100톤 미만: ~'24.1.16., ▲ 1톤 이상 10톤 미만: ~'25.1.16., ▲ 1톤 미만: ~'26.1.16.

이에 따라 2021. 1. 16. 당시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2026. 1. 16.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고,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6. 1. 16. 이후에는 유통되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 시 부여받은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된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2026. 1. 16.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 여부, 비공개 승인 필요성 등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점검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의무 이행 편의성을 높이고, 화학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유통·취급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12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11/23, 경기 광명시] 후진 중인 타이어롤러에 부딪혀 깔림
 [11/25, 경북 영덕군] 화물용 엘리베이터 수리 및 점검 중 운반구가 하강하여 끼임
 [11/26, 전북 전주시] 전신주에 올라가 고압전선 절단 작업 중 감전
 [11/29, 경기 용인시]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 천장 소방 배관 점검 중 떨어짐
 [11/30, 대구 달성군] 가동 중인 기계 롤러의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롤러에 끼임
 [12/1, 경기 안산시] 지반 평탄화 작업 중인 불도저에 부딪힘
 [12/4, 인천 서구]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워크숍 및 '26년 사업설명회 안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워크숍 및 '26년 사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2025년 12월 16일(화) 13:00~17:00(4H)
- 장 소: 대전선샤인호텔 5층 그랜드볼룸홀(대전 동구 동서대로 1700)

■ 주요내용

- '25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전문가 강의
- '26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내용 및 정책 방향 등

- 참고사항: 다수의 참석인원이 예상되므로 수행기관당 2명 이하 참석 권장

※ 별도 신청 불필요, 대중교통 이용 권장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notification/notice/construction?bbsid=B2025021400001&pstNo=20251208085938AEL58K>

1. 개정 취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5]의 개정사항 반영 및 건강관리카드 발급업무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비파괴검사 업무 발급요건 완화 개정(제3조 제1항)

나. 건강관리카드 발급 일련번호 기재란 추가, 유해물질별 건강관리카드 종류 표시방법 추가 및 발급기관번호 개정 (별표 1 개정)

다.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업무 종사 경력증명서(동료기재용)의 참고사항(카드의 종류) 카드 발급물질 추가(별지 제2호 서식)

라. 건강관리카드 발급 신청서 검토 결과표(별지 제3호 서식) 및 건강관리카드소지자 개인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의 '생년월일' 기재란을 '주민등록번호'로, '전화번호' 기재란을 '전화번호(휴대전화)'로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동법 시행령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마. 카드소지자 건강진단 교통비 및 식비 지급 신청서 중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로 자구 수정 및 신청방법을 현실화(별지 5호 서식)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notification/notice/construction?bbsid=B2025021400001&pstNo=20251124183806P1CLZA>

오이레터

AI는 번아웃을 막아줄 수 있을까?

"AI가 당신의 업무를 줄여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지배했던 이 낙관적인 예언은 2025년 현재, 복잡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AI가 업무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우리를 소진시킨다는 냉철한 현실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Microsoft의 2025 Work Trend Index Annual Report는 이러한 흐름을 '무한한 근무일(The Infinite Workday)'이라고 칭하며, 디지털 부채가 해소되기는커녕, 회의와 커뮤니케이션 양이 폭증하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글은 "AI는 번아웃 증후군 (이하, 번아웃)을 막아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최근 발표된 주요 논문과 여러 보고서들을 분석했습니다.

AI-번아웃의 역설

'AI-번아웃 역설'이란 기술이 노동을 줄여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AI 활용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이 가속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2025년 Sentry Tech Solutions의 연구에 따르면, AI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노동자의 번아웃 증상 호소 비율은 45%로, 비사용자(35%)보다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직무스트레스 이론인 자원보존이론과 직무요구-자원 모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원 보존 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스트레스를 방어하기 위해 심리적 자원을 소모합니다. 2025년 Frontiers in Artificial Intelligence에 게재된 Wang 등의 논문은 AI 시스템을 '이중가치(Dual-valence) 기술'로 정의합니다. AI는 업무 자원(Resource)인 동시에, 끊임없는 학습과 적응을 요구하는 거대한 요구(Demand)로 작용합니다. 새로운 기술변화를 지속적으로 익혀야 하는 압박은 직원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이는 결국 번아웃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직무 요구-자원(JD-R) 모델에서는 AI 도입이 직무 요구(Job Demands)를 질적으로 변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면, 인간에게는 고도의 판단력과 윤리적 책임이 따르는 복잡한 업무만 남게 됩니다. 이는 '인지적 휴식' 시간을 박탈하고 뇌를 상시적인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기술적 효능감(Technical Self-Efficacy)을 낮추고, 이것이 다시 번아웃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합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157>

직무스트레스 개입, 무엇부터 해야할까 - 심리사회적 위험 개입 우선순위

직무스트레스 평가 후 무엇을 바꿔야할까

직무스트레스 조사를 하고 나서 개입으로 보통 교육과 상담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열고 마음챙김 강의를 기획하고 필요하면 상담 프로그램을 붙입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예산과 인력과 시간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 선택으로 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달라진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업무량과 시간 압박은 그대로인데 왜 나만 더 잘 버티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더 바꿔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개념은 바로 이런 순간에 참고할 수 있는 틀로 심리사회적 유해요인을 다룰 때 무엇을 어디서부터 바꿀 수 있을지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살펴보게 도와주는 일종의 구조도입니다.

위험 개입 우선순위(Hierarchy of Controls): 위험을 줄이는 다섯 단계

이 글에서 말하는 위험 개입 우선순위(Hierarchy of Controls, HOC)는 직역하면 '통제의 위계'에 가깝지만 위험에 대해 어떤 개입을 먼저 고려할지 정하는 틀이라는 뜻을 살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화학물질이나 소음 같은 전통적인 유해요인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기본 원칙으로 보통 위가 넓고 아래로 좁아지는 피라미드로 그려 위에 있을수록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가장 위에는 유해요인 자체를 없애거나 줄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공정을 바꾸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아래는 덜 해로운 것으로 바꾸는 수준입니다. 독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은 공학적 통제입니다. 국소 배기장치처럼 설비를 통해 노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 아래는 행정적 통제입니다. 작업 절차를 바꾸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지침을 만드는 조치입니다. 맨 아래에는 개인보호구가 있습니다. 보호구를 지급하고 잘 착용하도록 관리하는 수준입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158>